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추진에 소상공인 반발 움직임

호남 10가구 중 6가구 슈퍼·시장서 식품구입... 소상공인 타격 불가피
 광주 전통시장연합회 10일 회의 열고 대응 수위 결정
 정부 매월 2차례 의무휴업 규제심판 과제 선정 논의 본격화
 "이커머스 등이 중소기업에 더 위협... 시민 선택권 보장해야"

정부가 10년 만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하면서 광주지역 중소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월 2회 의무 휴업 제도는 국민 의견 수렴과 그에 따른 제도 개선 권고 그리고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 최종 결정되지만,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형마트 상인들을 중심으로 벌써 우려와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특히 광주 등 호남권에선 10가구 중 6가구 이상이 중소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구매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전통시장·중소형마트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제도 폐지 맨 지역 소상공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민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규제심판위원회에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올려놓고 회의를 진행했다. 규제 개선을 건의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이해관계인인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전통시장·소상공인 보호 육성 및 의무휴업 규제 효과성, 온라인 배송 허용 필요성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규제심판위원들은 18일까지 온라인 국민 토론회를 거쳐 2차 회의를 열고 쟁점별 논의를 이어간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규제심판위원회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판단한 뒤 소관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게 된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최종적으로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정부에서 '뜨거운 감자'로 간주되며 관련 논의가 금기시되던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도의 존재 관련 논의를 정부가 앞장서면서 전국의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대구 서문시장에는 7월 말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전통시장의 고통이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고,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은 집단 반발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광주전통시장상인연합회는 오는 10일 회의를 열고 대응 수위를 결정기로 했다.

민경본 광주전통시장연합회 비대위원장은 "고물가 시대에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기도 전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폐지되면 상인을 피해는 볼 보듯하다. 의무휴업제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며 "장사가 되지 않아 전통시장 점포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휴업제 폐지가 될 경우 대기업 대형마트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도 "쉬는 날이 사라진다"며

존치를 희망하고 있다.

의무휴업 제도가 폐지될 경우 피해가 광주 등 호남권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말 내놓은 '식품소비 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남지역 가구 61.5%는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44.9%)과 재래시장(16.6%)에서 식품을 구입했다는 조사를 두고서

다. 같은 조사에 동네슈퍼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가구는 전국에 걸쳐 41.7%에 그쳤다.

반대로 대형마트업계에선 "규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유통시장이 이커머스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경쟁 구도보다는 온-오프라인간 대결이 주요 프레임으로 전

환됐다"며 "대형마트 규제보다 소비자 편익과 진정한 재래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영세 상인들의 적수(敵手)는 대형마트가 아니라 "동네 구석구석 침투한 식자재 마트와 쿠팡 등 온라인업체"라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입추에도 해수욕장 북적... 기운으로 접어들었다는 '입추'인 7일 함평 돌머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파라솔 아래에 앉아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색 판결·권고 2題

광주고법 "혼외자 아들도 가족"

조직폭력배 아버지 도피 도운
 혼외자에 친족 특례 적용 무죄

법원이 '사업가 납치 살해' 혐의로 쫓기던 국제PJ파 부두목 A(63)씨의 도피를 도운 혼외자(婚外子)에게 친족간 특례 규정을 유추,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철)는 지난 28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33)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판단을 유지했다.

B씨는 폭력범죄 단체인 국제PJ파 부두목 A씨의 혼외자로, 친구 C(33)씨와 후배 D(30)씨와 함께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5월 19일 50대 사업가를 광주시 서구의 한 노래방에 감금하고 마구 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쫓기고 있었다. 아들 B씨는 서울 신봉역 부근에서 A씨를 만나 8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도피 자금으로 제공했다. C씨는 B씨 부탁

을 받고 범인 도피에 쓰일 차량을 빌려줬고, 국제PJ파 조직원이나 B씨의 사촌 후배인 D씨는 아산 등지의 아파트를 빌려 은신처로 제공했다.

원심은 지난 2월 B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B씨 측이 제출한 유전자 감정서를 토대로 A씨와 B씨 사이 자연적 혈연 관계가 존재하며,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전향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 151조 2항 규정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로 피를 나눈 사이에는 인간 본성에 비추어 아무리 중한 죄를 저질러도 숨겨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친족간 특례 규정을 혼외자에게까지 적용한 것이다.

검찰은 "혼외자에 대해서는 친족간 특례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가 없다"며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9개월간의 도피생활 끝에 2020년 2월 아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형이 확정됐다. /김형호 기자 khh@

인권위 "행정입원' 남용은 인권침해"

정신질환자 의사 반해 강제 입원
 병원장·단체장 감독 강화 권고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자치단체장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이른바 '행정 입원' 조치는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7일 "전남 지역 한 자치단체장에게 행정 입원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정신의료기관에게는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도 요구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해당 병원에 본인 스스로 입원을 하기 원했지만 병원측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행정 입원 조치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행정 입원은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됐을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거쳐 자치단체장이 진행하는 강제 입원의 유형이다.

병원측은 "A씨가 두차례 자의 입원했던 환자로 퇴원과 동시에 병적인 음주 행위와 뇌전증 발작 증상을 반복적으로 보여, A씨의 건강 악화와 안전사고 우려를 고려해 보건소 등과 상의해 행정 입원 조치를 했다"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자의 입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원이 가능하지만, 행정 입원은 자신의 의지로 퇴원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면서 "A씨가 자의 입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자체가 행정 입원 절차를 밟은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자의 입원 권장, 자기결정권 존중 취지 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휴가철 사망사고 잇따라

구례서 물놀이 중학생 익사
 고흥서 낚시객 낙뢰로 숨져

휴가철 전남 곳곳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7일 오후 2시께 순천시 서면의 한 계곡에서 다이빙 하던 A(63)씨가 물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순천경찰에 따르면 A씨는 2m 높이에서 물로 뛰어 들었다가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오후 4시 20분께 구례군 토지면 섬진강에선 B(16)군이 물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광주에 사는 중학생 B군은 부모와 함께 섬진강으로 물놀이를 와 튜브를 타고 놀던 중 3m 깊이의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고흥 앞바다에선 낚시를 하던 50대가 낙뢰에 맞아 숨졌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4일 오후 2시 30분께 고흥군 팔영대교 인근 바다에서 낚시를 하던 50대 남성 C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C씨는 이날 지인과 함께 모터보트를 탄 채 감성돔 낚시에 나섰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C씨가 낚시도중 낙뢰를 맞았다는 지인과 선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